

전두환측 “재판부 요구땀 출석”...국민 공분 피하려는 꼼수?

골프 회동·호화 오찬 물의 속 변호인 발언 배경 관심 집중 막상 요구하면 불출석 가능성 임기응변식 대응 지적

전두환씨 측이 선고일 이전이라도 재판부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히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씨는 최근 골프 회동과 12·12 자축 호화오찬을 하면서도 그동안 알츠하이머 질환 등을 핑계로 대며 형사재판 불출석을 반복해왔기 때문이다.

전씨측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16일 광주지법 앞에서 전씨의 사자 명예훼손 재판이 열리기 직전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지난해 5월 24일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하고 “이 재판이 광주에서 제기됐을 당시 검찰이 헬기사격을 목격한 다수 증인의 편의를 위해 피고인 출석 없이 광주에서 재판을 하자고 제안했다”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지금까지 출석하지 않고 재판이 진행돼 왔으며, 현재까지 전씨의 재판 불출석이 법적 절차에 위반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판결선고에는 전씨가 출석할 것”이라며 “그 전이라도 재판부에서 전씨의 출석을 요구하면 결정에 따르겠

다”고 말했다.

전씨 측이 이 같은 주장에 나선 것을 두고 최근 골프회동과 호화오찬 사실이 밝혀지면서 커져가고 있는 국민적 공분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라는 분석 등이 나온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던 전씨는 12·12 군사반란 40주년인 지난 12일 서울의 한 중식당에서 군사 반란의 핵심 인물들과 함께 1인당 20만원이 넘는 호화 오찬 회동을 하는 모습이 목격됐고, 앞서 지난달 초엔 전씨가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라운딩하며 타수까지 또렷하게 계산했다는 영상과 목격담이 공개되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재판이 막바지인 시점에서 재판부가 전씨에게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일부 법조계의 시각이다. 또 전씨의 그동안 행태로 봤을 때, 재판부가 실제 출석을 요구하더라도 또 다른 이유를 내세워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형사재판은 민사와 달리 피고인이 공판기일과 판결 선고일에는 반드시 출석해야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판결 선고일에 출석하겠다”는 말도 사실상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형사재판 피고인은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출석하도록 돼 있어서다.

결국 이날 전씨 측이 밝힌 출석 의사는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위한 임기응변식 대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반영하듯 정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재판부를 상대로 전씨의 불출석 재판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구하자, 강력히 항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 광주 시민들이 방청석에서 정 변호사의 행동을 분통을 터트리며 재판부에 항의하다 쫓겨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씨의 출석여부에 대해선 일단 판단을 다음 기일로 미루고 “앞으로 3~4차례의 기일동안 증인신문, 헬기 사격감정서·감정관, 80년 당시 제작된 문건의 의견공방 등으로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내년 2월 10일로 예정됐다.

재판을 지켜본 5월 관계자들은 전씨를 반드시 출석시켜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는 “재판정에서 분통이 터지고 가슴이 찢어지고 있는데, 정작 피고인이고 실제로 만행을 저지른 장본인은 골프치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재판에 출석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재판부가 재판을 올바르게 끌고가는 정의를 세우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도 “재판부는 신속한 사법 처벌을 통해 전씨를 단



전두환씨의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가 16일 오후 광주시 동구 광주지법 법정동 앞에서 전씨의 불출석 재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홍식 5·18구속부상자회장은 “거짓과 위선으로 일관하고 있는 전두환을 처벌해야만 정의가 바로서고 오월 정신도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5·18 진실, 음악으로 알린다

광주시 왜곡 근절 홍보 영상 제작...연말 첫 선

광주시가 5·18 진실을 알리는 5·18 영상 제작을 선보인다. 5·18을 노골적으로 왜곡하거나 깎아내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광주시는 일부 극우세력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왜곡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지난 11월부터 ‘5·18 역사왜곡 근절을 위한 홍보영상 제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집중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역사왜곡 영상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5·18민주화운동 역사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홍보영상은 ‘쇼 미 더 트루스(Show me the TRUTH): 진실을 깨우는 낯선 울림(가제)’를 주제로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제작된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시나리오와 음악을 확정하고, 18일에는 옛 전남도청 민주광장, 국립5·18민주묘지, 전남대학교 정문 등 주요 5·18사적지에서 촬영을 진행한다.

촬영에는 지역 래퍼가 참여해 5·18 진실에 대해 소개한다. 광주시는 홍보영상

제작이 완료되면 연말 내에 광주시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채널, 시청홍보 전광판 등 각종 온·오프라인 홍보채널에 게시할 예정이다.

특히 광주시를 비롯해 5·18기념재단, 5·18기록관 등 관련 기관에서 각종 행사 시 역사왜곡 대응 홍보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광주시교육청과도 협력해 교육자료로도 활용한다.

젊은 세대에게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전하고, 왜곡자료 유포자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알려 역사왜곡·편향행위에 대한 처벌법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김옥중 광주시 5·18선양과장은 “5·18 민주화운동 역사왜곡·편향자를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홍보영상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올해 5·18민주화운동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편향한 온라인 게시물 127건(웹사이트 게시물 17건, 유튜브 영상 110건)에 대해 삭제 및 접속차단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고창 야산에서 불탄 시신 발견

16일 오전 9시께 고창군 성소면 암치리의 한 야산에서 면사무소 직원들이 시신 한 구를 발견해 경찰과 119에 신고했다.

당시 공무원들은 들불 진화 작업을 하던 중 야산에 지어진 가건물 주위에서 불탄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결과 사망자는 이 가건물에 사는 A(76)씨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자는 얼마 전부터 야산 인근에 가건물을 짓고 홀로 산 것으로 보인다”며 “면사무소 직원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창=김형호 기자 khj@

고급차 받고 특허 넘긴 전 국립대 교수 법정구속

고급 승용차를 받고 특허를 업체에 넘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전 대학교수가 2심에서 결국 법정구속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김태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 국립대 공대 교수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8000만원, 추징금 7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A

씨는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구속됐다.

A씨는 2006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정부 용역과제로 중소기업과 건강기능식품 소재 개발을 공동연구하면서 업체 대표로부터 에쿠스 승용차를 리스 형태(리스 비용 7천800만원 상당)로 받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9년 8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연구원 5명의 인건비 중 6000만원을 가로채고, 2011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물품

대금을 부풀려 결제하는 방식으로 연구비 2억1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업체 측이 공동특허권자로서 정당하게 권리행사를 할 수 있어 뇌물을 제공한 이유가 없다며 의견 등 법인 업무용 차량이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다른 승용차에서 쓰던 하이패스 선불카드를 업체 측이 제공한 승용차에 부착해 사용한 점, 해당 연구와 관계없는 학회 참석에도 이 차량을 이용한 점 등을 들어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장휘국 교육감 의혹 엄정 수사” 광주 시민단체 진정서 제출

참여자치21 등 광주 시민단체는 16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의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하며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의혹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광주시민 사회모임은 이날 광주 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지방선거 시기에 장 교육감에게 돈을 건네주겠다는 명목으로 한유홍 전임 지회장이 임원들에게 돈을 걷은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이 돈이 실제로 장 교육감에게 전달했다면 정치자금법과 김영란법 위반”이라며 “하지만 당사자인 장 교육감은 최소한의 소명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기관은 한유홍 전임 지회장이 돈을 걷은 사실이 있는지, 그 돈을 장 교육감 측에 전달했는지 등을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장 교육감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불미스러운 의혹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대법 “불공정 시비 전남대 국악과 교수 공채 취소 정당”

작년 불공정 시비가 일었던 전남대학교 국악과 교수 공채와 그에 따른 합격자 확정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전남대를 상대로 제기한 면접중단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 전남대 국악학과 가야금병창 분야 교수공채에 지원해 전공 1·2 단계 심사에서 1위로 통과했으나, 면접하

루 전인 지난해 1월 3일 대학 측으로부터 불공정 시비가 있다며 면접 연기를 통보받았다.

심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던 B씨의 이의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학 측은 공채공정관리위원회(공정관리위)의 심의를 거쳐 재심사를 결정했다.

전남대는 재심사를 거쳐 B씨를 최종 합격자로 확정했고, A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영화관서 술 마시고 소리 지르며 20여분간 소란 피운 70대



○...영화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70대 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서행.

○... 16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A(70)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께 광주시 서구 한 영화관 상영관에서 기방에 보관된 술을 꺼내 마시고 인성을 높이며 20여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관객의 영화 관람을 방

해했다는 것.

○...A씨는 이날 전북 순창에서 이웃 주민 20여 명과 광주로 등산을 겸한 여행을 온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일행 몇 명과 영화를 보러왔다가 소란을 피운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관객은 A씨의 행태에 항의하고 영화관측에 환불을 요구했다”고 설명.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혹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